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the Records of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김 유 선 (You-sun Kim)*

이 명 규 (Myounggyu Lee)**

목 차

1. 서론	3. 함평유족회의 업무 분석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업무활동 분류체계 개발
1.2 연구 방법 및 범위	3.2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분석
1.3 선행연구	4.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
2. 함평유족회 역사와 기록물 현황	4.1 분류표의 일반원칙
2.1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4.2 분류전개 및 기록물 맵핑
2.2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현황	5.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의 맥락을 기능적 출처주의를 통해 구현하며,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과 생산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기능분류체계 개발 방법론인 DIRKS를 사용하여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업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업무기능-업무활동-처리행위로 이어지는 업무분류표를 도출한다.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소장 기록물을 유형과 생산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범주를 결정한다. 기록물 맵핑은 업무분류표에 해당하는 업무분류체계에 1차적으로 실행하고, 2차적으로는 업무분류에 유형분류와 시대분류를 접목한 다중분류체계에 맵핑한다. 업무주제-업무활동-처리행위-유형-시대의 형태로 이어지는 기록물 분류표를 도출한다.

주제어: 업무분석, 다중분류체계, 매뉴스크립트, 민간 기록물, 민간인희생자유족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cords of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The content of the records is accordingly implemented through a functional source principle, and a classification table is presented in such a way that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by type and by production period so that the records can be used effectively. DIRKS, a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is used to conduct a functional analysis of Hampyeong massacre victims' families to derive a task classification table that leads to task function - work activity-handling actions. The category is determin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and nature of the time of the production of the record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families. The records are mapped according to the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which corresponds to the task classification table, and the multicategory system that drafts the type and period, which is used to classify the func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introduces a system for classifying records into task subjects, task activities, handling actions, types, and period.

Keywords: business process analysis, multicategory system, manuscripts, private documents, Association for Bereaved Families

*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yousun910@naver.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1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8년 1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55-175,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1.155>>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전쟁 전후(1948-1951)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대략 1백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가해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기억되어왔다.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은 안보이념의 강화에 이용되었고, 아군 권력이 자행한 학살은 이념의 영향에 의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빨갱이 단죄’로 치부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까지도 ‘빨갱이’로 치부되어 사회적 억압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학살사건의 진실규명과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간인학살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 겸용)를 결성하였다. 활발한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유족회는 1960년도에 탄생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년 만에 그 활동이 종료되었다. 유족회 활동이 재개된 시기는 1990년대이다. 1987년 군사 정권의 붕괴 이후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유족회가 출현하였고, 이들은 정부가 학살사건의 진상조사를 하도록 여러 차례 탄원했다.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위법)이 제정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화위의 활동은 5년 만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법원은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판결 근거로 인정하지 않

고, 유족들에게 희생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유족회는 잊힌 과거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유족회 활동의 증거가 되는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과 관련된 기록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족회에서 생성한 기록물과 학살의 진실규명에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은 군사정권에 압수, 폐기되면서 적절한 기록물 관리에 실패하였다(이무열, 2006, p. 88).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현재에도 기록물은 유실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유족회는 활동 회원의 세대교체를 겪을 때마다 단체의 존속이 불투명해진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몇몇 지역 유족회는 인근 지역의 유족회와 통합하여 활동하기도 하는데, 유족회마다 소장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아서 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에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족회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러 유족회 가운데 전라남도 함평지역의 유족회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 활동과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 생산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 유족회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류표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민간인학살사건희생자유족회의 기록물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하는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포함한다. 매뉴스크립트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카이브즈에 비해 소홀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기록물의 생산 출처가 뒤섞여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기록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함평유족회 겸용)의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DIRKS를 이용해 함평유족회의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토대로 기록물 분류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함평유족회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으며, 유족회 통합을 겪어왔고,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 경험이 없거나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족회에 비교하여 다양한 수행 업무와 소장 기록물의 내용을 살필 수 있기에 이후 다른 유족회 기록물을 관리할 때에도 함평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후에 함평 외의 지역 유족회 분류표를 설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차적으로는 이들 기록물에 관한 분류방안도 마련하였다.

1.3 선행연구

유족회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진상규명 활동 관련 연구와 유족들의 국가인식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족회 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와 관련해서, 특정의 역사와 관련한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분류에 관한 연구와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분류에 관한 연

구로 전명혁(2003)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민주화운동기록물을 바탕으로 기록물을 정리,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쉘렌버그의 '출처의 원칙' 중에서도 수많은 상이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유사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한 '집합적 기록물군'개념을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정리와 분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진임(2007)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한국YMCA 전국연맹'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여 매뉴스크립트의 분류체계를 연구했다. 그는 소장 기록의 목록을 AS5090과 DIRKS를 사용하여 기능분류표로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기록물을 조직의 기능분류에 맵핑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분류와 주제분류, 유형분류 방법을 제시했다. 박정옥(2013)은 기관별로 분산된 채 관리되고 있는 5.18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다. 분류표는 생산 출처에 따라 4가지 기록물군으로 범주화 하는 1차 분류와 생산시기별의 2차 분류, 그리고 관련 주제어(10개 범주)에 따라서 3차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록물의 형태별로 분류를 진행한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신동희와 김유승(2016)은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여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구축한 연구에서 사건관련 기록물의 수집범위와 대상을 기술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수집된 기록물의 분류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이영숙(2005)은 환경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단체 기록물의 분류방안을 연구했고, 그 방법으로 기능분류와 주제분류의 결합 방

식을 제안했다. 기능분류 방법론으로는 AS5090과 DIRKS를 활용하여 기능 분류체계 구현과정을 수립했으며, 여기에 환경연합 기록을 적용하여 환경연합의 기능분류표 및 처리일정표를 작성하였다. 김용일(2007)은 기업 사료관의 구축과정에서 초기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정리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연구했는데, 분류에 대해서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했다. 이때 다중분류체계는 기능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주제, 시대, 형태 등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해보면 우선 역사적 사건을 다룬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분류에 관한 연구로는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을 적용한 연구와 기능분류를 바탕으로 주제분류나 유형분류를 접목한 다중분류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분류체계 개발 연구들은 분류체계 개발 시 출처와 원질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체로 분류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한 다중분류체계가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업무분류표와 처리일정표를 제시하거나 분류체계에 기록물을 맵핑하고 있다.

2. 함평유족회 역사와 기록물 현황

2.1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1.1 연혁

함평유족회는 1993년 11월 22일 222명의 유족들이 모여서 결성한 조직이다.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출범한 유족회이며, 1960년에 국회에서

진행한 진상 조사 결과가 기록물로 남아 있는 유족회 중 하나이다. 2017년 현재는 1,001명의 유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유족회로 결성되기 이전에도 학살사건의 참상에 대해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 함평의 비극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0년 5월 21자 『한국일보』 조간과 석간의 보도를 통해서이다. 이후 곧바로 전남도의회와 제4대 국회에 의해 진상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족회장 정봉규, 부회장 정순도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석방되는 등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이적행위자로 탄압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김영택, 2001, pp. 19-32). 이후 93년도에 유족들이 모여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으며, 유족회의 창립 초기에는 특별법 제정운동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청원은 국회에서 외면 받았다.

그러나 함평유족회는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우선 사단법인 유족회 설립을 위해 정관을 마련하여 1998년 9월 2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학살사건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1년 12월 6일, 과거에 사건별로 운영하던 함평지역 8개 유족회를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사)로 통합함으로써 유족회 구성을 함평군 유족회와 8개 읍면지회로 체계화하였다(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014, pp. 6-12). 그 후 현재까지 유족회는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함평유족회의 조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함평유족회 조직 현황(2015.1.1.~2017.12.31.)

구성	고문	이사장 (회장)	이사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	재무
인원	1	1	1 (월야면지회장)	7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지회장	2	1	1

이렇듯 함평유족회는 역할분담을 통해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조직한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쌓인 경험 덕분이다. 함평유족회가 전남지역 유족회 중에서 최초로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회에 의한 사실 조사가 일찍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일부뿐이나 진실규명이 된 상태였기에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 등을 대동하여 공식적인 위령제를 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위령제 봉행이나 유족회 근황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학살사건을 알리는 데에 일조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족회 단체를 알리는 데 공헌했다. 둘째, 반공사상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정호기, 2006, pp. 61-62). 좌익 혹은 빨갱이의 반란과 난동으로 규정된 사건의 유가족들은 몇몇한 활동이 어렵다. 심지어 일부 유족은 활동은커녕 학살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우

며, 학살의 피해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뒤 자식에게까지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함평의 경우는 반공사상에 의해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기의 사실 조사에서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진실규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함평유족회는 민간인학살사건의 공론화가 어려웠던 시기부터 활동해왔고, 학살사건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이다.

2.1.2 함평지역 학살사건

함평양민학살사건¹⁾의 희생자 유가족이 만든 함평유족회는 8개 읍면지유족회가 통합된 단체이다. 각 유족회별 희생자현황과 사건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함평유족회의 탄생 배경과 사업내역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진화위의 함평 집단학살 조사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희생자 수는 진실규명자

1) 함평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40일 동안 국군 제11사단 20연대(전남지구전투사령부) 2대대 5중대에 의해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海保面)·월야면(月也面)·나산면(羅山面) 등 3개 면에서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무차별로 무고한 양민 524명이 집단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처음으로 학살이 일어난 것은 1950년 12월 6일이다. 같은 해 12월 2일 공비와 전투를 벌여 부대원 2명을 잃은 5중대는 월야면 정산리의 동촌(東村)과 장교(長橋)마을에서 주민 70여 명을 불러 낸 뒤,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논두렁에서 집단 사살하였다. 다음날에는 월야면 월악리(月岳里)에서 7개 부락 주민 130명을 어떤 조사나 기준도 없이 무차별 총살하였다. 이어 12월 10일에는 공비들이 마을 앞 도로를 파헤친 것을 주민들의 소행이라 하여 나산면 외치리(外峙里)에서 21명의 주민을 공동묘지로 불러 내 총살하였다. 1951년 1월 14일에는 해보면 상곡리(上谷里)에서 주민들을 불러 낸 뒤, 산기슭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5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524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1,454호의 가옥이 불에 타 없어졌다. 그러나 이 기록은 1960년 국회 양민학살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것일 뿐, 실제로는 1,5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 함평군 집단학살희생자 현황

읍면	사건	함평 11사단	양림 사건	함평 수복작전	불갑산 사건	전남 11사단	보도 연맹	적대세력 사건	함평 민간인
함평읍			28	17			12	3	1
손불면/신광면							7/16	23/40	76/87
학교면/엄다면				22/0			2/1	5/0	0/2
대동면				7	7	1	2	32	21
나산면		17(29)		6	6	1	8	27	17
해보면		90(38)			22	15	23	5	9
월야면		141(199)		2	1	4	11	2	11
타 군		10			54	3			1
계		258(266)	28	54	90	24	82	137	225

(미신청자)로 표기되어 있다(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011, p. 11).

진화위는 유가족의 진실규명신청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때문에 진화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희생자 수는 무연고자나 미신고자, 행방불명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사건은 활동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사건발생일과 가해조직에 따라 함평지역 학살을 정렬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충실히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함평 지역에서 벌어진 다양한 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유족들은 언론에 학살사건의 참상을 알렸고, 유족회를 조직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그뿐만 아니라 구술증언도 남겼는데, 구술증언이 사건 입증에 활용된 경우로는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화위는 2009년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희생자 유해발굴의 일환으로 '대보름작전'사건²⁾의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토된 159명의 유해 중에서는 29명이 여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무려 35명이 19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박선주, 2010, p. 126). 또한, 어린아이의 고무신 등의 유품이 발견되어 불갑산 지역에 학살당한 민간인이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렇듯 유족 증언을 통해 발굴된 유해와 유물들은 증거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2.2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현황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은 크게 문서 형태와

2) 대보름작전은 1951년 2월 20일에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가 전남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의 공비 근거지 케멸을 위하여 수행한 대토벌작전이다. 불갑산에는 빨치산이나 좌익에 가까웠던 사람들 외에도 국군에 의한 학살을 피하고자 입산한 민간인이 다수 존재했으며, 좌익 측의 협박에 못 견디어 입산한 민간인도 있었다. 국군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호남지구(지리산·백운산·백아산·덕유산·불갑산·회문산 등)의 공비 토벌을 담당했다. 이 기간의 적 사살은 약 1천 9백 5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 규모가 작은 불갑산에서 사살된 인원이 제11사단 전과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전투상보에 따르면 대보름작전으로 인한 국군의 피해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군의 과잉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청각 형태로 나누어진다. 각 유형별 기록물의 명칭은 ‘건’으로 통일하였다. 조사를 통해 분석된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유형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2.2.1 도서자료

도서는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명예회복’과 ‘추모·위령’, ‘연대’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명예회복에서는 유족회가 출판한 서적 및 국가 폭력과 관련된 도서 중 유족회가 수집한 도서가 존재한다. 추모·위령 기능에서는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도서형태로 제작한 보고서가 있으며, 연대 기능에서는 협력단체인 타 유족회의 위령제에 참석하여 받은 위령제 정기간행물 및 유관단체인 진화위나 연구소 등에서 발간된 도서 등이 있다.

문서철은 함평유족회 내부분서들이다. 지역별 조사 서류철과 위령제 문서와 위령탑 조성 관련 문서, 조직의 행정과 회계·보조금 정리 문서, 호적정정신청서, 진실규명신청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문서철은 유족회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나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철한 것이므로, 대부분 연도별로 묶여 있다. 또한, 원본 서류철이 한 건 있는데, 여기에는 편지류나 수기(手記)로 작성된 문서 및 복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다.

서류는 신문기사 및 청원서, 조직 내부 유인물과 감사장 등 한 두매 분량의 종이 문서가 속한다. 신문기사는 함평지역 학살사건 및 유족회원의 인터뷰, 위령제 봉행, 재판과 진실규명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함평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유족회 관련 기사를 실은 언론매체는 연합뉴스, CBS뉴스, YTN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의 중앙지와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등 다양한 지방지로 다양하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제외한 서류에는 207건의 운영관리를 위한 유인물과 유관단체에서 보내온 2건의 감사장 및 6건의 청원서 사본이 있다.

2.2.2 시청각자료

사진은 위령제 봉행 및 구술증언 수집 시 증인 사진, 학살표지석 사진 등 유족회의 행사나 역사적 사건 등을 담은 기록물이다. 총 138건의 사진이 있으며,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사진은 제외한 내역이다.

비디오테이프는 명예회복 및 연대 기능 영역에 속해 있다. 대부분이 방송사에서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하거나 다큐멘터리를 찍은 기록물이며, 이 외에는 문경 양민학살과 관련된 영상 2건과 외부 학술대회의 영상 1건이 있다.

<표 3>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구분	도서자료			시청각자료				계
	도서	문서철	리플렛	인화사진	비디오테이프	CD	DVD	
건	1,038	152	457	138	11	97	7	1,900
비율(%)	55	8	24	7	0.6	5	0.4	100

CD는 명예회복과 추모·위령, 연대 기능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명예회복의 경우는 비디오테이프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보도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유족회 회원의 구술증언과 국방부의 공식사과에 관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령제 영상이 CD로 보관되어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와 제주4.3의 평화공원 조성 보고서 등이 문서파일이 담긴 CD를 소장중이다.

DVD는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위령제 영상과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서파일이 담긴 기록물이 속하며,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체변화의 영향으로 생성된 유형의 기록물이다. 따라서 향후 개수가 늘어나게 될 기록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3 생산시기별 특성

유족회 기록은 한국전쟁기부터 현재까지 생산되어 왔으나 많은 기록이 소실된 상태이다. 함평유족회가 소장 중인 기록물 중 생산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함평유족회 기록물의 시간 범주를 정의하자면 <표 4>처럼

한국전쟁기와 4·19시기,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의 기록물에는 함평사건이 언급된 신문기사가 존재한다. 4·19시기의 기록물 역시 신문기사 몇 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는 유족회 활동이 불가능했고,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유족회가 결성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기록은 유족회가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에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위령제 봉행과 관련된 기록, 국회 청원서, 유족회 결성을 통해 형성된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또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나 도서, 지역 유족회의 위령제 간행물을 수집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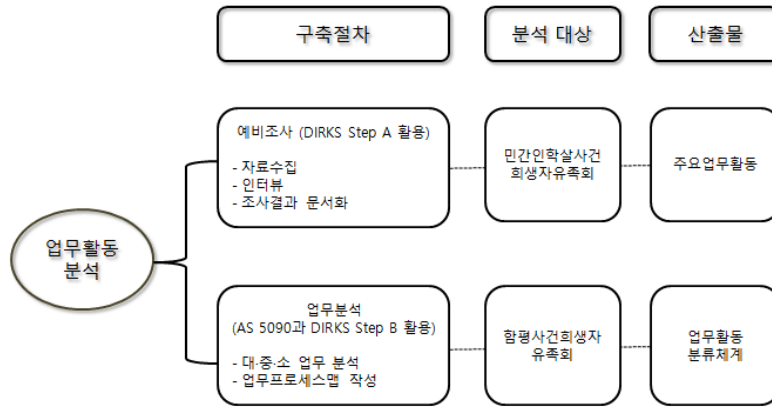
3. 함평유족회의 업무 분석

3.1 업무활동 분류체계 개발

함평유족회의 기록물에 대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AS5090과 DIRKS의 A, B단계를 사용한다. <그림 1>은 업무활동 분석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4>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생산시기별 특성

구분	한국전쟁기 (1945-1959)	4·19시기 (1960-1989)	2000년 이전 (1990-1999)	2000년 이후 (2000-현재)
자료/내용	- 신문기사	- 신문기사	- 유족회결성 기록 - 합동위령제 기록 - 청원서 - 신문기사 - 도서	- 합동위령제 기록 - 청원서 - 유족회 운영 기록 - 진실규명신청서 - 소송 및 재판 기록 - 연대활동/학술대회 - 신문기사 - 도서



〈그림 1〉 업무활동 분석 과정

먼저 ‘예비조사’단계의 조사범위는 민간인학살사건희생자유족회로 결정했다. 유족회를 대상으로 업무분석에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시행한 뒤, 이를 문서화하여 유족회들의 공통 업무를 파악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유족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함평유족회만 진행하는 특이한 사업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AS5090의 기능분석과 DIRKS의 ‘업무활동분석’단계를 이용하여 함평유족회의 업무활동 분류체계를 도출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함평유족회의 기록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록물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기록물 분류표를 개발할 때, 다중분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전조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목적은 조직의 구성과 업무 및 사회·정치적인 환경들의 역할, 이해관계자, 업무, 기록관리 현황 등 기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김익한, 2003, pp. 226-227).

유족회의 예비조사는 조사범위 확정 및 자료조사와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는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자인 함평유족회에 한정하여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결과와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조사범위

전국 각지에 분포한 유족회 조직의 수량을 조사한 통계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유족회 수가 많고(정호기, 2006, pp. 48-49), 유족회 간의 연락망이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와 이에 가입된 지역 유족회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전쟁유족회는 조직 내부의 사무국과 조사국 그리고 지역유족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참여 및 재정업무와 언론홍보 활동, 미신고자 접수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유족회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

하면, 각각의 지역유족회는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가해 주체 역시 다르므로 제각기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한국전쟁유족회의 주된 사업은 지역유족회와의 연계와 전국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및 언론홍보 활동 등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유족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103개의 유족회가 결성되었으며, 그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정관이나 회칙 등 조직의 사업현황을 기록화하는 유족회는 24개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비영리법인 지역유족회 가운데에서 내부 연락망을 통하여 연결이 가능한 곳은 11개뿐이며, 이 중 9개의 조직이 조사에 동의하였다.³⁾ 이에 9개의 유족회 조직의 기능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전쟁유족회를 제외한 지역유족회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지역명으로 대체한다.

2) 자료조사 및 인터뷰

예비조사를 위해 1차적으로 자료조사를 하였

는데,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이다. 자료조사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각 유족회에서 작성된 연차보고서, 정관, 회의록,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5>에 제시된 여러 문서자료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자료는 유족회의 홈페이지였다. 각 유족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칙과 조직구성, 연혁, 활동 등과 같은 핵심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발된 사건에 대한 자료 역시 제공하였다.

조직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유족회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유용했던 자료는 정관과 위령제 정기간행물이었다. 정관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통하여 유족회의 업무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매년 발행되는 위령제 정기간행물에는 한 해의 활동 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활동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표 5> 유족회 자료조사에 활용된 내·외부문서 유형

구분	유형	자료명
조직고유 정보원	웹사이트	한국전쟁유족회 (http://www.coreawar.or.kr/)
		금정굴인권평화재단 (http://gjpeace.or.kr/)
		10월항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http://10월항쟁.com/?go=main)
	정책 및 절차	사명진술문, 기관별 정관 및 회칙, 회의록, 연차보고서
	조직도표	조직도, 조직표
출판물	회보, 위령제 정기간행물, 사료집	
	기록물	생산, 관리되는 각종 기록물
외부 정보원	외부보고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6년 활동보고서

3) 9개의 조직은 서울(한국전쟁유족회), 대구,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전남 함평,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북 안동, 경남 창원지역 등의 유족회이다.

2차적으로는 함평유족회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⁴⁾ 내·외부 문서자료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인터뷰는 유족회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항목은 조직의 특성 파악, 기록관리 실태 파악, 기록생산 현황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3.1.2 업무분석

업무분석은 조직이 자신의 사명 및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기능과 활동, 처리업무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대-중-소 업무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유족회의 업무분석은 내·외부 자료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각 유족회의 업무 활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특이점을 가지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업무는 이후에 함평유족회의 업무분류표 작성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유족회의 업무분석에는 조직의 정관에 명시된 사명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유족회의 사명 및 목적을 업무적 기능으로 분석하여 유

족회의 주요업무를 정리하면 명예회복(Honor restoration), 진실규명(Truth), 추모·위령(Memorial service), 유족(Bereaved family), 연구(Research), 연대(Solidarity), 보건·의료(Hygiene·Medical), 보상·수사(Compensation·Investigation), 발굴(Exhumation), 매장지(Burial ground)의 명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 10개의 업무범주가 도출된다. 이들 범주의 영문 약칭은 영단어 첫 두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업무가 한데 뭉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단어 첫 알파벳을 합쳐서 대문자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족회의 업무를 분석하면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유족회의 주요 업무는 ‘명예회복’, ‘진실규명’ 그리고 ‘추모·위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쟁 시기에서부터 유족들이 공유했던 목표이며, 유족회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 유족회의 서로 다른 사업 중에서 특이점을 갖는 것은 ‘유족’과 ‘발굴’, ‘매장지’, ‘보건·의료’를 들 수 있다. ‘유족’업무에 포함하는 사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희생자 추가조사 및 해당사건 유족찾기’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은 희생자의 후손이 없거나 가족 전부가 사망하여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건 이후 유족들이 고향을 떠난 경우(정호기, 2006, pp. 52-53), 남은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인해 펼쳐지고 있다. ‘발굴’과 ‘매장지’ 사업의 경우는 희생자들이 수장(水葬)당했거

4) 인터뷰는 2016년 7월 25일에 함평유족회 사무실에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2월 10일에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함평유족회 기록물 관리 담당자이자 회장인 정근욱이다. 2016년 7월 25일 함평유족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표 11>의 문항을 바탕으로 질의했다. 2017년 2월 10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유족회 출범 당시와 현재의 회원 변화 등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다.

〈표 6〉 유족회의 업무 내용

업무 영역	약칭	상세 내용
명예회복	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감시 • 명예회복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 유족회 소장 자료를 활용한 간행물 출판 •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평화와 인권 교육 • 유족 증언 정리
진실규명	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사과 실현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청원 • 정사(正史) 수록에 기여
추모·위령	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 조성·운영 • 평화공원·위령탑 등의 추모 시설 조성·운영 • 위령제 등 추모문화행사 개최
유족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유족 등 장학 사업 • 유족회 운영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수익사업 • 희생자 추가조사 및 해당사건 유족찾기 • 회원간의 상호교류와 친목도모
연구	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학술활동 • 한국전쟁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연대	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유족회와의 연대 • 시민단체·연구소와의 연대 • 국제교류
보건·의료	H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
보상·수사	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실현 • 사건 재조사 및 가해자의 처벌 실현
발굴	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발굴 및 안치에 관한 사업
매장지	B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살 유해 매장지에 대한 현황 파악

나, 생존자가 적었기에 정확한 학살현장을 기억할 수 없는 등의 문제 탓에 유해를 수습하기 힘들었던 지역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다. 위의 사업들은 참혹한 과거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사업은 과거사 청산의 부진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유족의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업은 9개 유족회 중 단 한 곳에서만 주된 사업으로써 실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된 사안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모·위령 등 희생자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을 뿐, 생존자 또는 남겨진 가족의 아픔까지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3.2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분석

함평유족회의 조직 및 업무활동의 분석은 내·외부 문서자료와 인터뷰 결과를 문서화 한 결과물을 활용해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함평유족회의 연혁과 조직구성 등 개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업무의 대-중-소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는 업무활동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3.2.1 조사결과 문서화
 예비조사에서 획득한 정보들은 선별·분석·정리하여 일정 서식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화 한 내용은 예비조사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비조사 내용 중에서 문서화해야 하는 내용은 예비조사에서

얻은 정보, 인터뷰에 대한 세부 노트, 조직 맥락 문서 등이다. 이 중 조직 맥락 문서는 조직의 유형과 특성, 역사, 조직표, 법적·규제적 환경, 조직의 기능, 위험, 현재 기록관리 실태와 연관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표 7>은 예비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문서화한 것이다.

<표 7> 함평유족회 예비조사 결과

조직의 기본 정보	
단체명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약칭: 함평유족회)
조직유형	민간단체
현 조직 설립	1993년 '함평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란 명칭으로 설립
사명	
함평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진행, 후대에 관련 역사 기록으로 남겨 보존	
연혁	
1951년~1960년 유족들이 탄원과 진정서 제출하며 억울한 죽음을 호소, 관련 유족들 관계기관에서 수배 및 구금조치	
1960년 5월 한국일보 특집보도 '전남 함평서도 양민천여', '나는 시체더미서 살아났다'	
1961년 5월 군사쿠데타로 국회통보 공문서 사장 및 유족 활동 중지	
1994년 11월 국회에 명예회복 요청 청원서 제출	
1995년 12월 유족회 결성	
1996년 7월 거창특별법외거 명예회복 전남도에 신청	
2000년 6월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서 제출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권 침해에 관한 진정서 제출	
2004년 6월 6.25전쟁전후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률안 제출	
2006년 2월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에 명예회복 신청서 접수	
2006년 11월 진화위 명예회복 신청 접수 마감, 함평군내에서 600여명 접수	
2009년 12월 함평집단학살희생자명예회복 사료집(1) 발간, 150권	
2010년 3월 제5차 호적정정신청서 광주와 목포법원에 접수, 38건	
2011년 3월 2010년관 함평군사 양민학살 기록사항 확인	
2012년 3월 함평유족에게 통합유족회 발족 사실 통보, 사건별 8개 유족회 해산하고 "사단법인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로 통합	
2013년 2월 집단학살지 표지석 설치	
2014년 2월 과거사법 처리 촉구 청원서 제출	
2016년 12월 사료집 (8) 발간	
함평유족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 •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 성역화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 상호간과 회원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배·보상 등에 관한 소송 	
함평유족회 기록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회무전반과 재정전반에 대해 관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가 각자 총무와 재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족회 활동에 관한 내역은 회장이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외부로부터의 기록보관 요구는 없으나, 법인 허가 관청이나 보조금을 주는 행정처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문서로 남긴다. • 현용 기록물과 비현용 기록물 모두가 유형 분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족회 운영 관련 문서는 당해 연도 분량만큼 철하여 연도 분류가 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함평유족회의 기록 관리 실태를 정리하면, 함평유족회는 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외부의 법적 규제에 의한 기록관리가 적었다. 그러나 유족회 활동 특성상 행정적·법적 증거가 확고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기록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록 관리에 투여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부 이용자의 경우 기록관리 담당자의 설명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록물 분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록이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기록물은 시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3.2.2 업무활동 분석 및 분류체계

업무분석은 조직의 업무를 크게 분류하는 대업무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업무, 그리고 더는 나뉘질 수 없는 조직의 업무단위인 소

업무로 규정하는 과정이다.

함평유족회의 업무분석에서 대업무는 민간인학살사건희생자유족회의 업무분석을 통해 얻은 유족회 주요업무와 함평유족회 연혁을 사용하였다. 중·소업무 분석에서는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함평유족회 내부자료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모두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조직의 사명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업무를 분해하는 방식과 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로부터 소업무를 도출하여 업무를 그룹화하는 방식 모두가 활용되었는데, 이 방식들은 유족회 조직의 특성상 기능에서부터 처리행위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조해가며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업무분류체계에 있어서 업무활동 분석 결과는 '주요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가진 업무활동인 '주요업무'

〈표 8〉 함평유족회 업무 분류체계

구분	대(업무)	중(활동)	소(처리행위)	구분	대(업무)	중(활동)	소(처리행위)
주요 업무	명예회복	출판	사료집	고유 업무	유족	운영관리	행정
			단행본				유인물
			간행물			회계	
			학술자료			보조금	
		교육	교육자료		인사관리	회원관리	
		증언정리	CD제작		협력단체	시민단체	
			비디오테잎제작			유관단체	진실화해위원회
		정보관리	자료수집		보상·수사		배·보상
			자료정리			소송자료	
			신문류			재판기록	
	진실규명	청원	국회 청원서	제조사	진실규명신청서		
	추모·위령	위령제 실행	위령제 봉행				
			위령제 문서				
		추모공간 기획	위령탑				
	추모공원						

는 '명예회복', '진실규명', '추모·위령'의 3가지가 있다. 함평유족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유업무'는 '유족', '연대', '보상·수사'의 3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대업무 다음의 제2계층인 중업무활동은 각 업무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함평유족회의 각 업무에 따른 중업무의 활동영역과 처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업무를 정리한 업무 분류체계는 <표 8>과 같다.

업무 분류체계는 기록분류표(records classification scheme)의 바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함평유족회의 기록물분류표를 제시하되, 유형분류와 시대분류를 접목한 다중분류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4.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

기록 관리의 기본적인 쟁점은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물이 적절히 분류되어야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철(filed)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분류는 기록을 이용할 때 기록의 소재를 밝히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전명혁, 김영경, 2001, p. 76).

함평유족회 기록물 분류는 일차적으로 기관의 업무 및 조직분석을 통한 업무분류를 사용한다. 이 단계는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업무분류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함평유족회의 업무-활동-처리행위까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업무분류를 한 뒤에는 원질서의 존중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유형분류를 실시한다. 유형분류 영역에는 도서, 문서철(file), 서류(item), 인화사

진, 비디오테이프, CD, DVD가 속하며 기록물의 형태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시대별 자료를 원하는 연구자의 효율적인 검색기능 지원을 위한 시대분류를 시행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4.1 분류표의 일반원칙

함평유족회는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기록물을 수집하는 수집형 보존기록관의 성격과 조직의 사명 및 목적수행을 위한 업무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기록물의 보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검색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성격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표의 일반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이 분류표의 목적은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정리 및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편철이나 서가배열 등과 같은 기록물의 물리적 배열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분류 대상은 함평유족회 소장기록물을 위주로 하여 분류표를 설계하되, 향후 추가될 기록물과 다른 지역 유족회 기록물도 분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둔다.

셋째, 분류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 1차 분류는 업무분류를 바탕으로 처리행위 단위까지 도출한다. 2차 분류로는 기록물의 유형 분류를 하는데, 이때 기준에 보존 및 관리되어 오고 있었던 원질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마지막 3차 분류는 생산 시기에 따른 시대분류를 시행한다.

넷째, 분류 대상은 기록물의 편철 단위로 하

며, 단위 명칭은 '건'으로 통일한다. 철 단위 이하의 분류보다는 여러 편철이 구성하게 될 시리즈 및 하위그룹계층을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한다.

4.2 분류전개 및 기록물 맵핑

4.2.1 함평유족회 기록물의 분류전개

분류의 1차 작업은 업무분류다. 유족회 및 함

평유족회의 업무분류를 통해 도출한 업무분류표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분류기호의 부여에 관해서는 대업무의 경우 앞의 3장에서 얻은 유족회 대업무의 약칭을 사용하여 각각 'HO', 'TR', 'ME', 'BE', 'SO', 'CI'로 부여했다. 중업무 활동은 1부터 4까지 한 자리 숫자로 부여하였으며, 소업무의 처리행위는 01부터 04까지 두 자리 숫자로 표현하였다. 업

<표 9> 함평유족회 업무분류체계 기호

대(업무)		중(활동)		소(처리행위)			
영역	기호	활동업무	기호	처리행위	기호		
명예회복	HO	출판	1	사료집	01		
				단행본	02		
				간행물	03		
				학술자료	04		
		교육	2	교육자료	01		
		증언정리	3	CD제작	01		
				비디오테이프제작	02		
		정보관리	4	자료수집	01		
				자료정리	02		
				신문류	03		
		진실규명	TR	청원	1	국회청원서	01
		추모·위령	ME	위령제 실행	1	위령제 봉행	01
위령제 문서	02						
추모공간 기획	1			위령탑	01		
				추모공원	02		
유족	BE	운영관리	1	행정	01		
				유인물	02		
		재정관리	2	회계	01		
				보조금	02		
		인사관리	3	회원관리	01		
		연대	SO	협력단체	1	시민단체	01
유관단체	2			진실화해위원회	01		
				연구단체	02		
보상·수사	CI	배·보상	1	소송자료	01		
				재판기록	02		
		재조사	1	진실규명신청서	01		

무분류의 기호는 이후 항목이 늘어날 경우 추가하여 전개할 수 있다.

분류의 2차 작업은 유형분류이다. 유형분류는 크게 도서자료와 시청각자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7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영문 명칭의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여 기호를 부여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은 <표 10>과 같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3차 작업은 기록물의 생산 시기에 따른 시대분류이다. 분류방식은 학살사건이 발생한 희생자발생시기, 유족회가 설립되고 활동했던 유족회활동기, 이후에 여러 사정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유족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한 유족회 재활동기, 진화위가 설치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인 진화위활동기 등으로 구분하여 함평유족회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대 미상(0), 희생자발생시기(1), 유족회활동기(2), 유족회재활동기(3), 진화위활동기(4), 2010년 이후(5)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시대별 분류기호는 0부터 5까지 한 자리 숫자로 표현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각각의 분류체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분

류체계 간의 연결은 대-중-소-유형-시대의 순서로 구현되며, 각 항목의 구분은 '-'를 이용하도록 한다.

4.2.2 기록물 맵핑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들을 앞에서 도출한 분류체계에 연결하여, 구체적인 분류표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분류표의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분류단계 별 기록물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1) 업무분류체계 기록물 맵핑

함평유족회의 대-중-소의 업무에 따라서 실제 기록물을 맵핑해 보았다. 먼저 대업무와 중업무의 업무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을 맵핑해 보았으며, 이는 <표 12>와 같다.

함평유족회 업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6개 업무영역과 14개 활동들을 실제 기록물로 맵핑한 결과 총 1,900건의 기록물이 전부 연결되었다. 이것은 유족회 기록이 업무활동을 통해 생산되며, 외부로부터 수집해 온 기록물 역시 각 업무와 활동을 위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0>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유형분류 기호

유형	도서	문서철	서류	인화사진	비디오테잎	CD	DVD
기호	B	F	I	P	V	C	D

<표 11>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시대분류 기호

구분	희생자 발생시기	유족회 활동기	유족회 활동재개기	진화위 활동기	현재	시대 미상
시대	1948-1959	1960-1989	1990-1999	2000-2009	2010-현재	
기호	1	2	3	4	5	0

〈표 12〉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의 업무별 맵핑

대(업무) 영역(기호)	중(활동) 업무활동	건수	중기능	건수	소계	비율(%)
			업무활동			
명예회복(HO)	1. 출판	623	3. 증언정리	58	1,224	64.4
	2. 교육	249	4. 정보관리	294		
진실규명(TR)	1. 청원	6			6	0.3
추모·위령(ME)	1. 위령제 실행	189	2. 추모공간 기획	10	199	10.5
유족(BE)	1. 운영관리	232	3. 인사관리	2	265	14.0
	2. 재정관리	31				
연대(SO)	1. 협력단체	45	2. 유관단체	127	172	9.0
보상·수사(CI)	1. 배·보상	21	2. 채조사	13	34	1.8
계					1,900	100.0

〈표 13〉 함평유족회 기록물 분류표

대업무 (영역)	중 (활동)	소 (처리)	유형	시기	대업무 (영역)	중 (활동)	소 (처리)	유형	시기		
HO	1	01	B	0-5	BE	1	01	F	0-5		
		02					I				
		03					F				
		04									
	2	01	C								
		01	B								
	3	01	C		SO	1	01	B	0-5		
		02	V								
	4	01	F			2	01	01		B	
		01	B								
		02	01				I				
			02				B				
TR	1	01	I	0-5				V			
ME	1	01	C	0-5		CI	1	01		F	0-5
			D								
			P								
	F										
	2	01	F			02	01	F			
			01		F						
02			B								

2) 다중분류체계 기록물 맵핑

다중분류체계는 함평유족회의 업무분류체계에 유형과 시대분류를 접목하여 분류표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는 유형분류와 시대분류에 따른 기록물 맵핑을 한 뒤, 업무분류체

계를 포함한 최종적인 분류표를 제시하여 분류체계의 완성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 맵핑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5. 결 론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은 완전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희생자의 유족들은 유족회를 조직하여 학살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단체의 활동 내용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의미와 가치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족회의 기록관리를 도울 수 있는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함평유족회를 사례로 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업무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원질서의 존중과 기록물 검색의 편의 증대를 고려한 유형 및 시대분류 방법을 접목하는 다중분류방법을 사용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평유족회 업무분류체계 구현을 위하여 업무분류표를 작성했다. 업무활동으로 대업무는 유족회 업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10개의 업무범주에서 유사한 부분을 추출했다. 그 결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추모·위령, 유족, 연대, 보상·수상의 6개 대업무가 도출되었고, 각각의 약칭은 HO, TR, ME, BE, SO, CI로 나타낼 수 있다. 업무활동에 해당하는 중업무는 1부터 4까지의 한 자리 숫자로 표현하였으며, 처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업무는 01부터 04까지의 두 자리 숫자로 표현했다.

둘째, 다중분류체계 구현을 위한 작업으로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에 유형분류와 시대분류를 적용한 뒤 분류기호를 부여했다. 먼저 유형

분류는 도서, 문서철, 서류, 인화사진, 비디오테이프, CD, DVD의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류기호는 영문 명칭의 알파벳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류기호는 B, F, I, P, V, C, D이다. 함평유족회는 유형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유형분류를 사용함으로써 셀렌버그의 원질서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시대분류의 경우는 유족회 기록이 생산된 시간 범주를 함평유족회에 맞게 재구성하여 구분하였다. 시대 미상, 한국전쟁기, 4·19시기, 2000년 전, 2000년 이후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시대별 분류기호는 0부터 4까지의 한 자리 숫자로 표현하였다. 시대분류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효과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함평유족회 소장 기록물을 업무분류체계와 다중분류체계에 각각 맵핑하였다. 업무분류체계에 기록을 맵핑함으로써 함평유족회의 업무와 활동, 처리행위까지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분류체계에 한 번 더 기록물을 맵핑함으로써 분류표의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의 결과물은 업무-활동-처리행위-유형-시기로 연결되는 분류기호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함평유족회 기록물의 물리적인 배열 및 서가 상의 정리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함평유족회 산하의 읍면지회유족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족회 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며, 유족회 기록물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영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광주: 사회문화원.
- 김용일 (2007). 기업사료관 구축 시 수집사료 정리프로세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익한 (2003).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 연구, 8, 212-267.
- 박선주 (2010). 6.25전쟁 당시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불갑산 용천사지역)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인류학적조사. 중원문화연구, 15, 125-150.
- 박정옥 (2013).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이무열 (200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이해: 그 두 번째. 정세와 노동, 18, 76-93.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 전명혁 (2003). 매뉴스크립(Manuscripts)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13, 189-204.
- 전명혁, 김영경 (2001). 기록관(Archives) 건립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민주화운동 자료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 65-90.
- 정진임 (2007). 매뉴스크립트 분류표 개발방안 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호기 (2006).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 - 전라남도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41-76.
-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011). 함평집단학살희생자명예회복 사료집4 상권. 전남 함평군: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014). 함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명예회복 사료집7. 전남 함평군: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Hampyeong Massacre (2011). Hampyeong Massacre Victim's Honorary Recovery Data 4-1. Hampyeong: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Hampyeong Massacr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Hampyeong Massacre (2014). Hampyeong Massacre Victim's Honorary Recovery Data 7. Hampyeong: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Hampyeong

Massacre.

- Jeong, Jin-im (2007). A study on Possible Ways to Develop Manuscript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Korea YMCA National Federation' Collection possessed by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ngji University.
- Jun, Myung-Hyuk (200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anuscripts. *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13, 189-204.
- Jun, Myung-Hyuk, & Kim, Young-Kyoung (2001). A study on the Role of Archivis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Archives: Focused on the case of thr Korea Democracy Movemen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 65-90.
- Jung, Ho-Gi (2006). Associations of the Bereaved of Civilian Victims of the Korean War and 'Fact-Finding Movements' - With Focus on the Region of Southern Jeolla Province.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9(2), 41-76.
- Kim, Ik-han (2003). Practical Application of DIRKS-Manu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8, 212-267.
- Kim Yong-il (2007). A study on arrangement process of initial collected record when building business archiv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nghi University.
- Kim, Young-Taek (2001). *The Korean War and Hampyeong Massacre*. Gwangju: Social Culture Center.
- Lee, MooYeul (2006). An understanding of the massacr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sceond time. *Jeongseoi and lodong*, 18, 76-93.
- Lee, Young-Sook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NGO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73-101.
- Park, Jeong Ok (2013). A Study of Classification Scheme in the Lists May 18 Archives. Master's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rchival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Park, Sun-joo (2010). Anthropological analysis of civilian exhumation of kwangam-ri(Bulgap MT.) in Haebo-up, Hampung Country, Chunnam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Journal of JungWon MunHwa*, 15, 125-150.
- Shin, Donghee, & Kim, You-seung (201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oDunRi Digital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3), 1-30.

